

월요광장

지역민을 위한 광주다운 도시 재생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도시재생연구소 이사

광주다운이란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견해서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 인권, 평화와 같은 중심 가치와 이를 실현시키는 문화, 역사, 도시경관 등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최근 지역 사회의 화두인 광주다운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지정되기 위해 지역 사회마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란 2013년도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성격도 다양한데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개발하는 사업과 낙후된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침체된 지역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도시 재생 사업이 현재 큰 성과를 낸 지역이 드물었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지원도 넉넉하지 않았고 재생과 커뮤니티 전문가가 역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서 많은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광주도 이용섭 시장이 취임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와 도시 재생 등 모든 분야에서 광주다운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광주다운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한 상징탑 건설과 현재 지연되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그리고 사람 중심, 문화 중심, 일자리 중심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시야로 재생 사업을 바라 보면 물리적 재생과 공동체 복원 두 가지

가 함께 가야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되는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재생이 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사업이 되거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지역이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이 걱정이 됩니다. 편리를 위해서 앞서 가는 지역의 내용을 똑같이 따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비슷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생 사업의 성패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으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이 있을 때만이 아닌 지역 자체적으로 재생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행정의 편의와 법적인 문제로 지역민의 참여가 제한되어 왔고 또 힘들여 키운 지역의 활동가들이 스펙 등 여러 이유로 배척되기 일췌였습니다. 저는 양동 새마을마을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아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한 활동가들과 지역의 일에 관심 및 실행력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며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지역 재생의 핵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지역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조그마한 힘만 보태 드리면 넘치는

열정과 추진력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하며 앞으로의 광주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 뿐만 아니라 새마을마을사업과 소규모 재생 사업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광주의 주 관심사인 질 높은 광주형 일자리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시책도 이러한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광주시와 지자체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 스스로 실행력을 갖고 지역의 정신적 가치와 함께 광주다운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를 통해 우리의 자부심도 더욱 고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광장 새 필진으로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소장은 조선대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강대 건축과 조교수를 지낸 뒤 현재 민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도시 건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해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꿈꾸는 2040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엔 남은 시간이 없다



임용철
위민연구원·다큐 감독

요즘 반향철을 맞아 극장에서 가장 발길이 이어지는 영화는 단연 '말모이'다. 영화 '말모이'는 일제강점기 주시경 선생 등이 이끄는 조선 광명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편찬에 대한 실제 사건을 영화한 것이다. 영화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우리말 교육뿐 아니라 사용까지 금지됐고 국어 시간에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배웠던 시대라는 암울했던 역사를 극적으로 풀어낸다. '말모이'는 '백사전선사'의 각본을 썼던 염유나 감독의 탄탄한 대본과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에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있었던 실화가 주는 감동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며 문득 생각나는 또 한편의 영화가 있었다. 작년 여름 기대와 달리 흥행에 실패하고 극장에서 사라진

'허스토리'란 영화다. 영화 '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스물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관부재판을 다룬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된 '위안부' 원고 세 명과 여자정신근로자에 의해 일본 공장에 동원된 '근로 정신대' 원고 일곱 명이 일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사건(관부재판)의 실제 재판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영화 '허스토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지만, 실제 재판 당시의 관계자들이 영화 속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영화 제작자와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허스토리'는 영화평론가들 사이에 2018년 안타깝게 묻힌 영화로 꼽힌다.

2019년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다.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되는 해이며, 광주 학생운동이 발생한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극장가와 방송의 율해의 화두도 '역사'다. 암울했던 당시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한 영화나 드라마 혹은 다큐멘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필자 또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영화 '허스토리'에 언급된 '근로 정신대 할머니'를 소

재로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일본 나고야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 정신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선 여자근로정신대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의 광기가 극에 달한 일제가 전시 체제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로 미쓰비시 등 군수공장 등에 투입된 배우자가 없는 12~40세의 조선 여성들을 말한다.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된 당시 12~14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은 돈도 벌고 상급학교로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가 혹독한 인권침해 속에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후 돈 한 푼 못 받고 고국에 돌아온

다. 하지만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동원 목적과 경위가 일본군 위안부와는 달랐음에도 당시에는 "일본에 정신대에 끌려가면 위안부"라는 소문이 돌았다. 결혼을 앞두고 위안부로 오해받아 결혼이 쉽지 않았고 간신히 꾸린 가정도 오래 못가고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60여 년 세월을 징용 사실조차 숨긴 채 살아야만 했다.

이런 나고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바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소송 지원회)라는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이다. 관부재판에 이어 새롭게 일본에서 재판을 하는데 바로 할머니들이 동원된 나고야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0여 년에 걸쳐 일본 최고 재판소까지 진행된 재판에 드는 비용과 할머니들의 체류비 일체를 부담하며 재판을 진행하지만 끝내 패소하고 만다.

이에 자금을 받아 한국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생기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작년 11월 29일 대법원은 '원고' 할머니들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 동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든 사과와 배상은 끝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면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흔이 넘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고

광주와 전남, 상생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장석주
호남대 대학원장

광주와 전남은 전라도 천년의 동반자로서 시·도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상생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역시 양 시·도가 성과를 함께 나눈다는 대원칙과 신뢰 속에 합의의 이루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도 상생 협력 사례이며 혁신도시를 거점 도시로 육성하여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행정부 국정기조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은 노무현 정부 시절 양 시·도에 각각 조성해야 할 혁신도시를 하나

의 공동 혁신도시로 만들기로 합의하고 문서로 협약하였다. 먼저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2005년 12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지자체 성과 공유 계획'을 제안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 100%를 광주·전남 공동 발전 기금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고 혁신도시를 나주로 유치하였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2006년 2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정부와 시·도민에게 큰 뜻을 밝혔다.

현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 발전의 거점이 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2018년 3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하고 '혁신도시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혁신도시 시군2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의 '혁신도시 시군2'(2007~2017)이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기반 구축이었다면, '혁신도시 시군2'는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인근 지역

경제 발전을 통한 균형 발전에 주안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혁신도시의 성과가 확산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나주 빛가람동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만들어 전남도와 나주시가 정주한 지방세는 2017년 말 기준 총 2925억 원으로 전남도가 2122억 원, 나주시가 803억 원을 거두었다. 순수 이전 기관이 낸 지방세만 537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공동 혁신도시에서 정주한 지방세 일부는 혁신도시 공동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수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많은 시·도민과 의회,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동 혁신도시가 어느 한 쪽의 소유물이 아니듯이 세제상 관할 행정 구역에서 정주하지만 양 시·도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해야 당연한 것이다.

새해에는 혁신도시 시군2 주요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인근 지역

시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나주 빛가람동에 들어설 발전재단과 복합혁신센터는 양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할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컨트롤 타워이기에, 건립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소요될 운영비 등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공동 발전 기금을 먼저 조성한 이후 발전재단 설립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시·도민의 거룩한 상생 의지로 생겨난 공동 혁신도시가 신성장 거점도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당시의 상생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혁신도시 성과물이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인접 시·군·구와 상생하는 동반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똑같은 일도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양 시·도가 공동으로 협업하여 이루어 간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든 공동 혁신도시의 의미와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社說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수사로 진실 밝혀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바른미래·평화당은 손 의원의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이 목포시에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했고, 이 지역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됐다고 SBS에 의해 처음 보도된 것은 6일 전이다. 손 의원에 게 부동산 투기,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손 의원은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 예산 1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문화재 거리 일대 재생 사업)인 목포시에 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은 최소 9곳에서 10곳, 14곳, 20곳으로 늘었다. 부동산을 매입한 명목자는 손 의원의 조카와 지인, 손 의원의 남편 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손 의원이 국회의원인 되기 전 운영하던 회사 등이 다.

일제 재판 기록으로 의향 전라도 재확인됐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으로 형벌을 받은 수형자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온 지역 독립운동사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 강점기 수형인 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잇그제 밝혔다. 보안법이나 소요, 치안유지법 위반 등 독립운동 관련 죄명의 수형자도 광주·전남이 19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 중 86.9%인 2282명이 사형(66명)·중신형(9명) 등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호남 의병과 3·1운동 참가자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형자 가운데 독립 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2487명이었으며 이 역시 광주·전남이 7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연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온 광주·전남의 독립운동이 실제로는 가장 활발했다는 점을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 상당수가 광복 이후 좌우 대립 속에 어렵게 생활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포상뿐만 아니라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전남 독립운동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학술 연구를 통해 '의향' 전라도의 위상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자신을 우월하고 배려한 세종에게 장영실이 보답한 최고의 성과물이 바로 자력루(自力樓)다. 세종은 어떤 왕보다도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계 제작에 총력을 기울였다." 역사학자 신병주의 저서 '참모도 산다는 것'에 나오는 내용이다.

최근 노광민 전 주종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의 남자'다. 2012년 대선 후보 비서실장, 2017년 대선 선대본부 조직본부장을 역임한 그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5·18과 관련해 수배를 당한 이후 노동 운동에 뛰어들어 전기 기술자로도 일한 바 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날을 샀던 조선의 역사나 이권 다툼과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정치나 별반 다르지 않다. 실패한 대통령 결에도 참모도 있었

다. 그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는 귀의 역할은 했을지언정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입의 역할엔 충실하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참모의 존재는 위기를 맞았을 때 진가가 드러난다. 7년의 입란을 후세에 교훈으로 남겼던 '징비록'의 저자 이 대표적이다. 참모라 유성룡, 개혁을 추구하고 실학을 주창했던 정약용은 시대를 초월한 참모의 표상이다.

노 비서실장 또한 역사의 실험대 위에 섰다. 그의 역할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도 달랠 것이다. 무엇보다 해 앞장섰던 중종의 간신 남곤이 그렇다. 최근 노광민 전 주종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의 남자'다. 2012년 대선 후보 비서실장, 2017년 대선 선대본부 조직본부장을 역임한 그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5·18과 관련해 수배를 당한 이후 노동 운동에 뛰어들어 전기 기술자로도 일한 바 있다.

참모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정·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국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